

주요 토론내용

김철규 서강바른포럼 회장

- 지난 5년간 우리나라 ICT는 중심축이 없었다. 엣박자가 지속됐다. 콘텐츠는 물론 ICT 정책의 구심점이 없었다는 말이다. 4개부처로 분산된 이유로 정책 중복이 많았고, 정책공백도 심각했다. ICT 업무 조정 또한 제대로 안됐다. 그결과 ICT 성장률과 평가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ICT 벤처 창업 숫자도 줄었다. 더구나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반도체 호조를 마치 ICT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소위 삼성전자 착시현상이다.
- 박 당선인이 공약한 정부 3.0시대 즉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스 정부가 되기 위해선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변화를 추진하려면 정부 조직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ICT 전담부처 설치는 이의 일환이라고 본다
- 현 정부의 ICT 정책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한 만큼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면 ICT 자체의 성장·발전은 물론이고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체 산업의 ICT 융합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과 ICT가 합쳐지는 전담 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기술과 ICT는 추진 방향이 다르다. 과학기술은 중·장기적 목표를 갖지만, ICT는 분초를 다투며 즉각 대응해야 하는 등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과학기술이 마라톤이라면 ICT는 100미터 달리기와 같다. 생태계가 그렇다는 뜻이다 마라톤과 100미터 달리기는 코치도, 선수도, 훈련방법도, 경기전략도, 경기장도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듯 성격이 다른 만큼 당연히 별개로 다뤄져야만 한다.
- 현정부가 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쳤는데, 과학기술은 존재감이 없었고 따라서 과학기술과 ICT를 합치면 이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ICT 생태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종사자도 과학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본다.
- 지난번 상암동 중소기업DMC에서 있었던 후보초청 간담회에서 박근혜당선인은 내게 분명히 전담부처 설치를 “하겠다고 생각해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선인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으로 믿는다. 우리 박근혜 당선인은 신뢰의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아니신가?